

FTA 동향



관세청,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관세청은 복잡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
였다. 관세청은 어려운
무역환경 하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후 추정보다는 사전에
기업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
으로 기업이 성실신고 의지가 있어도 복잡한
통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중소 수출입기업 등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흐름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유의할 점, 세관의 지원
제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담았다. 통관
이전 단계에서 품목분류에 대해 미리 세관의
심사를 받는 방법,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이나 통관 이후
단계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관세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안내
등이 그 예이다.

【주요 내용】

- ① 통관 이전 단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② 통관 단계 (기업 및 개인통관 절차, FTA 활용방법)
- ③ 통관 후 기업지원 (관세환급, 중소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보세공장 제도 등)
- ④ 사후심사 및 납세협력 프로그램 (AEO, 납세도움정보 제공, 수입세액정산제 등)
- ⑤ 납세자 권리보호 (권리구제 절차 등)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업이 가산세 절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외
직구 반품환급 방법, 면세점 이용시 주의사항
등 개인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책자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 등 민원부서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누리집, 전자국회
도서관 및 교보문고에 e-book을 무료 게시
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성실신고 지원

이 책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도 기존에는 기업이 관세청에 신청 하던 방식에서 10월 중 웹 기반 시스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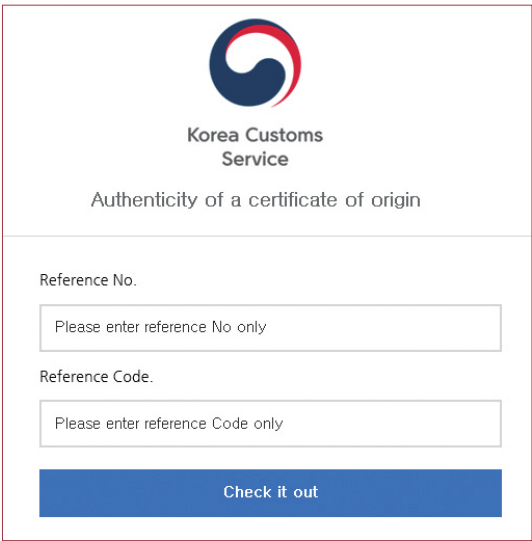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FTA 원산지증명서 검색 용이해져 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시 적극활용 가능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간소화 주소】



Korea Customs Service

Authentic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Reference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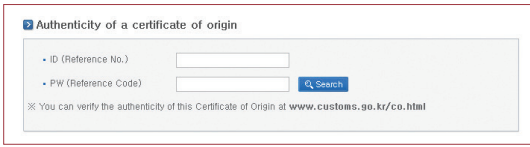
Please enter reference No only

Reference Code.

Please enter reference Code only

Check it out

【기존 주소】



Authentic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ID (Reference No.)

PW (Reference Code)

Search

※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간소화 주소) <http://www.customs.go.kr/co.html> ⇒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
(기존 주소) <http://www.customs.go.kr/kcshome/co/CertificateOfOriginViewNew.do>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하였다.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8개국의 C/O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FTA포털 → CO-PASS → 국가별 C/O 발급정보

이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영문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

관세청은 10월 28일부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시스템(이하 FTA-PASS) 영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FTA-PASS :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중소기업 등이 협정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류의 발급과 보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영문 FTA-PASS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FTA 기준에 맞는지 판정하거나, FTA 특혜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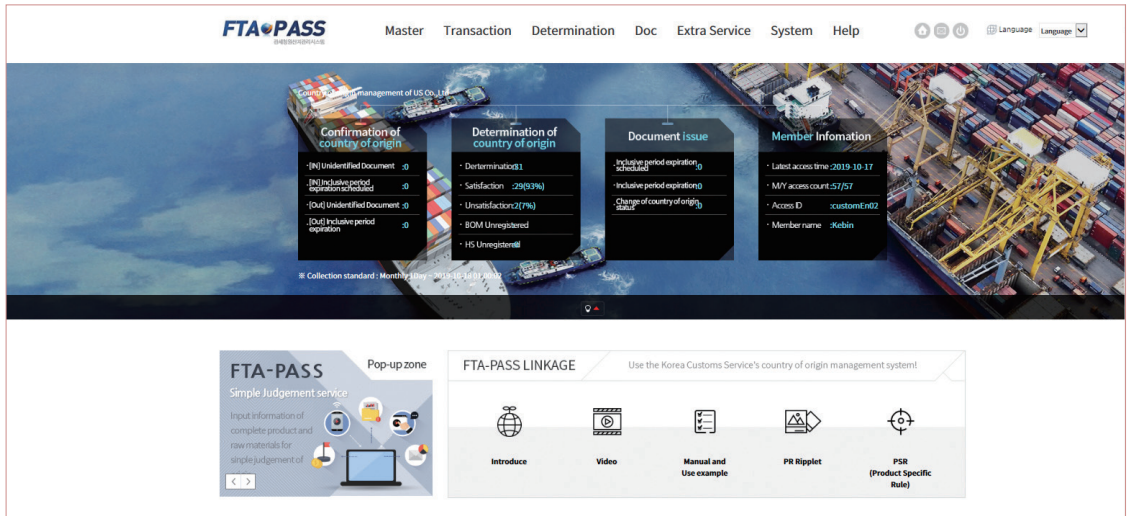
또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따로 없던 해외 진출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에 FTA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FTA-PASS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대표적으로 ‘맞춤형 FTA-PASS’의 개발로 회원가입 항목을 28개에서 7개로 축소하여 이용 절차를 단순화시켰다.

‘간편 ERP연계모듈’의 개발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FTA-PASS 연계에 필요한 항목을 74개에서 40개로 줄임으로써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할 연계 비용을 2,000 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8백만원 가량 절감 시켰다.

【영문 FTA-PASS 화면】



특히 FTA-PASS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2만 1천여 개 기업이 가입해 1억2천만건 이상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고, 28만여 건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등 효율적으로 FTA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수출입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문 FTA-PASS 서비스 등의 기능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개선으로 통관애로 해소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C/O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하여 C/O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 왔다.

* C/O 정정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 발급번호를 채택

그러나 C/O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C/O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C/O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C/O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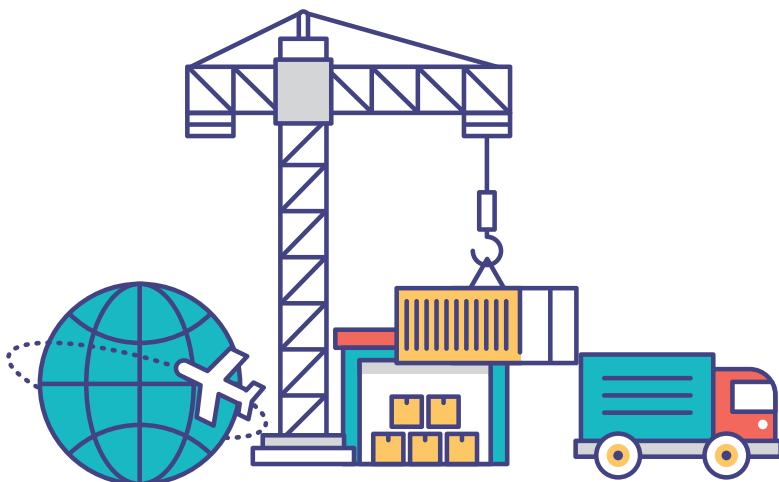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C/O 중 일부가 중국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2017년 1,860건, 2018년 4,730건)가 있어 왔다. 이 또한 최초 발급 C/O와 정정발급된 C/O의 발급번호가 동일한데 기인한다.

* 중국은 '정정발급'의 개념이 없어, 현행 시스템 상 최초 수신된 (韓→中) C/O번호와 동일한 C/O번호(정정발급)가 재 수신시 오류 메시지 통보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간 C/O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 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C/O 정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19일(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 개최

관세청은 지난 11월 6일 「수출기업 지원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총 10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 대책」에 따라 전국 30개 세관에 구성되어 활동중인 「수출기업 지원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더 많은 기업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통관 및 기업지원 행정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위원단이 총 46편의 응모작에 대하여 기업지원의 ‘충실성’,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등 총 4개 분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0편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6일 개최된 발표대회에서는, 김영문 전 관세청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서정일 국제원산지 정보원장,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처장 등이 현장에서 엄정히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 4편, 우수작 3편, 장려작 3편을 최종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관세청이 이번 경진대회에 제출된 총 46개 출품작에 사용된 단어를 행정안전부 Big Data 분석툴인 “헤안”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 · ‘기업’ · ‘지원’ 단어가 월등히 많았다.

베트남 등 신남방국으로의 수출 거래선 다변화 지원,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전문성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협업 지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중점 지원, FTA 활용 · 수출통관 ·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지원 등의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활동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 Big Data 분석툴 “헤안”을 활용하여 출품작 46편의 단어 빈도 분석

각 세관별로 주요 수출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세관은 세관-경기도-코트라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성공단 패쇄로 큰 손실을 입은 R사에 대한 동남아 신흥 시장인 베트남으로서 최초 수출(약 40만불)과,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조하는 H사의 미국, 터키 등으로의 최초 수출(약 5만불) 성공을 지원하였다.

서울세관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하며, 싱가포르 등 신남방국 시장에 헤어, 화장품 등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G사에 대해 관세행정 지원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규격인증, 판로개척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진출국을 대폭 확대(2개→9개)하고 전년 대비 1,700배가 넘는 수출성과(금액기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세관도 지역 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한 「전자상거래 연구회」를 발족하고, 민·관 협력 전자상거래 교육체계 마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마케팅 설명회 개최 등 기업-대학-세관간의 3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에 매진한 결과, 3개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판로 개척(20만불)에 성공하였다.

광주세관은 광주광역시 등 18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거버넌스 협의회를

운영하며, 각종 수출 관련 정보와 지역에서 제공하는 74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통합포털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기청,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수출유망 핵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평택세관은 안성시 주관 시장개척단 참여 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요 수출 물품의 FTA 특혜 적용 여부, 현지통관 애로 사례 등 관세행정상 지원도 함께 제공하였다.

*현지의 전문기관이 통관절차, 식품 관련 통관법령 등을 사전 조사

마지막으로 울산세관은 수출 시작 기업이 자금부담 등으로 수출을 조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최초 수출기업을 추출할 수 있는 분석툴을 자체 개발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FTA 컨설팅 등 관세행정상 지원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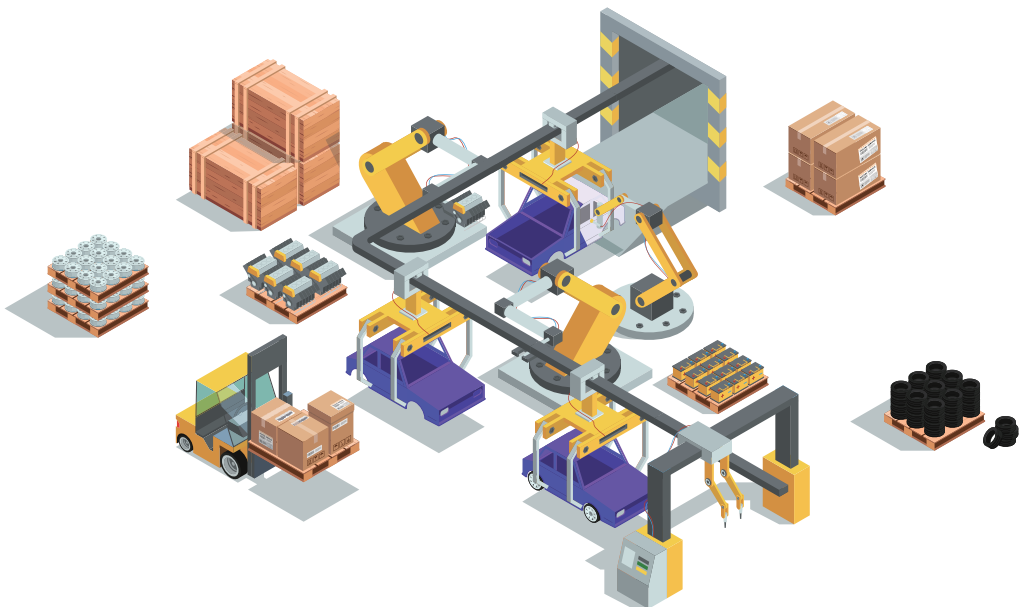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HS code) 설명회 개최

관세청 산하 관세 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11월 6일(수)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과 공동개최하여, 회원사를 주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품목분류 담당자가 업체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1: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11월 11일(월)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FTA 활용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회사에서 성태곤 FTA집행기획관은 FTA의 안정적 활용과 교역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청의 EODES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들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남방 정책 추진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국내 기업 관계자, 신남방지역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세관공무원 11명을 비롯하여 주한 대사관, 국내 FTA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오전 세션에서는 신남방지역과의 안정적 FTA 활용을 위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도입 등 원산지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C/O) 정보를 세관 당국간 교환함으로써 무역업체가 C/O를 세관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 생략 가능
(한-중: 2016.12월 도입, 한-인니/인도: 2019.1월부터 개발중)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신남방지역의 FTA 활성화 및 비관세장벽 등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태국의 FTA 통관애로 사례(태국 관세청), 베트남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및 활성화 방안(신한 관세법인), 신남방지역의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KOTRA) 및 신남방국가의 주요 쟁점사항 분석 및 관련 사례발표(패스원 관세법인)가 있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는 심갑영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관세청, 기재부, 오후세션의 발표자가 참여하여 신남방국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FTA 활용촉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후세션 발표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마지막 질문은 유사누적과 교차누적 도입시 원산지 검증에 관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에서의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담당관 이철재 과장은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제3국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므로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인력증대가 필요하나 먼저 전문성을 키워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였다.

성태곤 FTA집행기획관은 이번 세미나가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세미나를 발판으로 삼아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에 원산지증명서(C/O) 소급 발급 적극 요청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이하 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 하도록 권고했다.

* CEPA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념과 유사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 인도수출검사위원회로 인도측 C/O 발급기관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4조에 따라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럼에도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

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인도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송부 하였다.

아울러 주인도 관세관도 EIC를 방문하여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EIC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하겠다고 최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도 EIC는 우리기업 A사에게

C/O를 소급 발급하여 A사는 국내 세관에 특혜관세 사후 적용 신청으로 1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불어 양국간 교역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전기 · 전자, 자동차, 건설, 무역분야 등 470여개 우리 기업 인도 진출(KOTRA, 18.6월 기준)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움 발생시 관세청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또는 해외주재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우리 수출입업체에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세관명	지원센터 전화	E-mail
인천본부세관	032-452-3644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7	gwangjusupport@korea.kr
평택본부세관	031-8054-7047	fta016@korea.kr

【참고 2 : 관세청 해외주재 관세관 연락처】

국가	전화
베트남(호치민)	+84-28-3822-5757(내선 13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62-21-2967-2555
인도(델리)	+91-11-4200-7064
태국(방콕)	+66-2-247-3242
미국(워싱턴)	+1-202-939-0844
미국(LA)	+1-213-385-9300(내선 70)
중국(북경)	+86-10-8531-0844
중국(상해)	+86-21-6295-5000 (내선 205)
중국(청도)	+86-532-8399-7732
홍콩	+852-2860-1566
일본(동경)	+81-3-6400-0695
EU(벨기에)	+32-6-661-0070

※ 관세관 상세 연락처(이메일 등)
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은 11월 27일(수) 대전 연수원 채움관에서 ‘2019년 하반기 원산지 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전국 세관의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28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하였고,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접국가간 세율차를 악용한 원산지세탁과 다국적 기업의 수출가격 적용 오류 등과 같은 위험요소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을 공유·확산하고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환경·안전관련 물품, 다국적 기업관련 위험 등 실질요건 위반이 의심되는 정보분석사례를 우대 평가하였다. 이날 ‘최우수상’은 중국 주변국가 광물의 중국산으로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하였다.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정은영 관세행정관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리비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김태형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고, ‘장려상’에는 인천세관 장현규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FTA) 교역비중 확대에 따라 고위험 품목 · 기업 타겟팅 강화, 부서간 통합조사를 통해 불법 · 부정 특혜 위반을 엄정 차단하는 동시에 형식요건 위반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 계도함으로써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무역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섬유 · 의류 등 검증취약산업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계약상대국의 과도한 사후검증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사후검증) 2016년 228개사 → 2017년 814개사 → 2018년 636개사 → 2019.9월 256개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 중국 · 일본 · 인도 · 호주 ·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4일(월) 오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하였으며,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간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 · 서비스 · 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챕터 구성】

- ◆ 상품, 무역규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

▶ RCEP의 의의

-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 로써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 ·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됨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 (48%), 교역 9.6조불(29%)(2018년 IMF)

-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 중위연령(2017, UN) : 인도 26.7세, ASEAN 29.2세 vs 한국 40.8세 일본 46.3세, 미국 37.6세

-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 · 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 · 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됨

-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 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함

- 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됨

▶ RCEP 협정문 합의 주요 내용】

- ① (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

-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가치사슬 참여 촉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 가속화가 기대됨

- 또한,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 · 특허 · 상표 · 디자인 등 지재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하여, 그동안 지식재산권 챕터가 없었던 한-아세안 FTA를 보완함

- RCEP 역내가 한류 중심지임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중소기업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고려,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고, 정부조달, 경쟁 등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챕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함

- ② (무역원활화 기반 마련)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

- 원산지 기준 관련 그간 RCEP 참여국과 맺은 7개 FTA*마다 각각 다른 원산지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함

* 한-싱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호주 / 한-중국 /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여도 재료누적이 인정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 아울러,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하여 통관분야 원활화를 통한 우리기업들이 RCEP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③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

- 서비스의 경우,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하여,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함

- 투자 분야에서는 對RCEP 국가 최근 투자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범을 확보함

- ④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

-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등 역내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뉴질랜드 FTA, 교역 확대와 농림수산업협력에 크게 기여중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차를 맞이하여 제4차 한-뉴질랜드 FTA공동위원회*를 11월 7일(목)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한-뉴 FTA 제18.3조(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에 의거해, 2015.12월 한-뉴 FTA 발효 후, 총 3차례(2016.3월, 2017.4월, 2018.4월) 개최

우리측은 김기준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뉴질랜드측은 미셸 슬레이드(Michelle Slade)외교통상부 무역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9.11.7(목) 10:00~12:00, 서울
- 참석자 :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미셸 슬레이드(Michelle Slade)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무역경제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명
- 주요 내용 : 한-뉴 FTA 발효 후 5주년 평가 및 이행현안 논의

그간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시장개방* 등을 토대로 양국간 교역 증대와 함께 농림수산업협력(전문가 훈련, 농어촌학생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 뉴질랜드 7년 이내 전품목, 한국 15년 이내 수입액 기준 96.4% 관세 철폐

2015년 FTA 발효 이후 양국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FTA 특혜 품목들이 양국 교역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한-뉴 교역(억불) : (2006) 16.4 → (2010) 21 → (2015) 24.9 → (2016) 24 → (2017) 25 → (2018) 31

우리측은 FTA 발효이후 관세가 철폐된 건설 중장비 · 축전지 · 아연도강판*등 공산품 위주로 뉴질랜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對뉴질랜드 수출(2015년 → 2018년, 백만불) : (건설중장비, 기존관세율 5%→0%) 41 → 83, (축전지, 5~12.5%→0%) 19 → 24, (아연도강판, 5%→0%) 15 → 20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이행 상황과 양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그간 개최되었던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업협력위원회(2019.3.19일, 웰링턴), 위생 · 식물위생 위원회(2019.5.14일, 웰링턴), 상품무역위원회(2019.7.18일, 웰링턴)

특히, 인력교류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농어촌 지역 청소년 대상 뉴질랜드 여학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양국간 신규 농림수산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기준 FTA교섭관은 “제4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 비자 활용률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양국의 인력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1. 13일(수) 공동으로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채널*에서 모아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애로를 「전주기 FTA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 (예시)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해외기술규제정보 시스템(www.knowtbt.kr), FTA 1380(www.fta1380.or.kr),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 등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3만여 건의 FTA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외국의 시험·인증 취득과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서 기업들은 불편하고 정부의 지원업무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업무 시스템의 애로·건의 기능을 하나의 대표 시스템으로 연동시켜 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책반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의 기능 시연회와 함께 정부·유관기관 대상 사용자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전주기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시범사업 구축 완료보고회】

- 일시 및 장소 : 2019.11.13.(수) 14:00 ~ 16:00,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지역FTA센터 관세사 등 60여명
- 주요 내용 :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 정부·기관 사용자 교육 실시

시연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FTA 종합지원센터」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접수되는 연간 수만 건의 상담·컨설팅 내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일괄·관리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제도개선이나 외국과의 이행협상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초까지 시범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설계를 수정·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주기 FTA 플랫폼」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인도네시아-호주 경제동반자협정(IA-CEPA) 발효 눈앞

인도네시아-호주 경제동반자협정 배경 및 전망은 2007년 8월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2009년 4월에 연구가 완료되었다.

2010년 호주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와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을 통해 시작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8년간의 지속적인 협의 및 타진을 통해 2019년 3월 4일 두 국가는 인도네시아-호주 경제동반자 정(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에 서명하였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 20일 호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2기 취임식 축하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긍정적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FTA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가 야당에서 요구한 FTA 관련 수정안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해 지난 10월 21일 FTA 비준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11월 상원에서도 무탈한 통과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호주 원산지 상품의 99% 이상이 2020년까지 면세 또는 상당히 개선된 관세를 적용받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Australia-New Zealand)의 8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송아지, 냉동 쇠고기, 양고기, 곡물사료, 강판 코일, 감귤류, 당근 및 감자 등의 주요 상품에 대해 수입 허가 자동 발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수출 및 수입업자의 상품 무역 촉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호주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호주 수입에 대한 잔여 관세를 즉시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FTA 최초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해 양국 간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해당 FTA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호주는 인도네시아 전기차에 대한 자유로운 원산지 요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출처 : 호주 외무성, 호주 통계청, The guardian 신문, 호주 주요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개시 선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뽀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11월 25일(월) 08시 30분,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지난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시 캄보디아측의 교역자유화 논의 제안을 시작으로,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거쳐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간 FTA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하였다. 금번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 선언으로 지난 10월 한-인니 CEPA 실질타결, 11월 RCEP 협정문 타결에 이어, 신남방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 개선 가속화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개도국과 추진하는 중요한 FTA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빈개도국에서 G20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축적한

산업발전 경험을 FTA를 통해 후발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이고, 전체 인구중 35세 이하의 인구가 7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국가로서,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추진하고 있는 바, 신남방지역의 주요한 생산 및 수출 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액/GDP(달러) : (2013) 45억/154억 (29.2%) → (2015) 39억/181억(21.5%) → (2017) 49억/222억(22.1%)

- 한국의 對캄 투자 실적(1997~2017) 약 46.3억달러로 누적 FDI 2위(1위 중국)

산업부는 향후 1년간 심도 깊은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시장개방과 함께 경쟁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했으며, 10월 16일(수) 인니에서 양국 통상 장관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양국은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하여 금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 하였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통상산업부장관은 11월 25일(월) 부산에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정상 임석 하에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 정식명칭: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대한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hilippines on the Early Achievement Package of the Negotiations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양국은 지난 6월 통상장관간 한-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한-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이 그간 협상에서의 조기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 1차: 2019.6.4-5 / 2차: 2019.7.15-17 / 3차: 2019.8.12-14 / 4차: 2019.9.10-13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필 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협정문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면서,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번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를 통해 양측은 상호 관심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개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우선 합의한 바, 필측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합성고무 등) 등을 개방하고, 우리측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등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 FTA 협상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한-필 FTA 협상 조기성과 합의로 양국은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한-필 FTA 최종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한-필 FTA 협상이 타결되도록 잔여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